

지방의회,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평가받자

정부, 인사권독립·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 포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지방의회 권한확대, 책임·투명성 강화·주민 중심 새로운 자치 시대 열어야

미국의 역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버락 오바마는 모두 지방의원 출신이다. 링컨과 오바마는 일리노이주의원, 루즈벨트는 뉴욕주의원 출신이었다. 이처럼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나라에서는 지방의회가 젊고 유능한 정치신인의 등용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1991년 첫 지방의회 출범 당시 20~30대 지방의원 비율은 13%였다. 하지만 2018년 선거 결과 20~30대 지방의원 비율은 6.3%로 하락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를 외면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힘든 근무여건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또한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별도의 보좌인력이 없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형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추진에 속력을 내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무산됐지만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방자치의 날' 박람회에서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사·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방안,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정활동 공개 등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집행부로 돌아가야 할 사무직원들은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사·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지원도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예산을 통해 의원 보좌관 도입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 없이 지방의원 보좌관을 도입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

제19대 국회에서도 사·도의회에 의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사·도 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 및 자율성 제고와 더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하기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송방량이 처벌의 구대를 벗어나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운영, 지방의회별 비교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전남지사, 경전선 전철화 국비 확보 나서

국회 방문, 현안사업 지원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지역의 오랜 숙원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사업 등 국고 확보에 나섰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수뇌부와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내년도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싹타리를 풀기 위한 여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경전선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유일한 철도 교통망으로 영남권역은 복선 전철화가 이미 완공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송정-순천 호남권 구간은 일제 강점기 건설 뒤 80여년 동안 한 차례도 개량되지 않은 채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호남 낙후의 상징처럼 남아있다.

김 지사는 "단선 구간 전철화가 이뤄지면 동서 간 인적·물적 교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기본 설계비 반영에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 국회 의결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주요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23일에는 문화상 국회의장과 안상수 예결위원장,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이해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 서삼석·정인화 예결위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서구의회 '마복탄약고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 서구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복탄약고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 등 서구의회 전원은 지난 9월 7일 마복탄약고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조속한 이전을 요구(광주일보 2018년 9월 18일자 6면)하는 등 지난 1월부터 탄약고 이전을 촉구해 왔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연면적 37만㎡에 달하는 마복탄약고는 지난 65년간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지역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탄약고 철거 후 도시계획 재수립 발표에 따라 정부 및 국방부에서 26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려했지만 2017년 군공항 이전사업과 연계되면서 다시 중단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주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탄약고 이전을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도시디자인 미래비전선언문' 발표

국제도시디자인포럼 폐막

광주시가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도시디자인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광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그룹과 미래세대를 양성하기로 했다. 국내 최대 도시디자인 학술대회인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이하 '도시디자인포럼')이 2박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광주 도시디자인 미래비전선언문' 30일 폐막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도시디자인, 광주다움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에서 도시설계·건축 등 전문가,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폐막식은 3일 간의 행사 스케치 영상 상영을 시작

으로 남승진 건설문화교육연구원 원장의 전체회의, 특별회의 등 학술회의 결과 발표, '광주 도시디자인 미래비전선언문'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 도시디자인 미래비전선언문'은 이날 오전 열린 특별회의에서 시민들과 함께 난상토론 후 속의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은 광주다운 도시디자인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포럼에서 도출된 담론과 철학을 바탕으로 광주가 나갈 길을 모색하고, 사람중심 '광주다움'을 담은 도시디자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대행사로 열린 '2018 국제도시디자인포럼 청년캠프'에는 28명이 참가해 멘토링을 시간을 가졌으며, 12월 1일 폐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佛 '노란조끼' 시위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항의하는 '노란조끼' 시위자들이 파리 중심부 광장에 모여있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조끼' 시위가 폭력사태로 재차 번질 것에 대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연합뉴스



넓고 깊은 바다에서, 미래 인류의 유익한 삶을 위해 뿜어내는 해양바이오산업의 주역들!
건강한 먹거리는 물론 기능식품, 기초의약, 생활화학, 대체에너지 분야 등 아직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분야까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이 사업이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2018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사업을 펼쳐 전남지역 46개의 예비창업자와 수산기업에게 혜택을 드렸습니다!

- 1 전남지역 예비창업자 및 유망기업 발굴
- 2 수산산업에 특화된 창업 및 기업교육 실시
- 3 수산 가공 기술 및 마케팅, 입주 지원

제품개발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인증 및 분석 지원 등

HACCP기준 가공식품 및 GMP기준 기능성식품 생산 및 OEM입가공시설 완비
통조림 제조 장비/ 추출*농축설비/ 파우치 제조 장비/ 건조(동결*저온진공)설비

문의전화: 061)550-1722~5
홈페이지: www.jmbic.or.kr
www.jbf.kr